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년 9월 27일(수) 조간
담당자	정대희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211, dhjeong@kdi.re.kr)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044-414-2286, wchang@kipf.re.kr) 구자현 KDI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2-397-1309, jahyun.koo@kdi.re.kr) 남창우 KDI 연구조정실장 (044-550-4158, cnam@kdi.re.kr)
배포일시	2017년 9월 26일(화) 09: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역동성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의 역할: 진입·퇴출 활성화를 중심으로

- 보도자료는 KDI 연구보고서(2016-13) 「역동성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의 역할: 진입·퇴출 활성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정부의 금융시장정책이 기업의 진입·퇴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기업의 창업 및 성장,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를 실시함.
 - 기업부문의 진입·퇴출 정체는 우리나라 금융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데 기인할 수 있어 각각의 과정에서 금융정책의 역할을 평가하고 정책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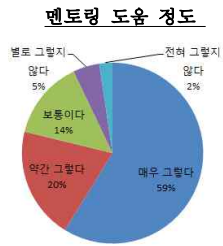
1) 본 보고서의 총괄연구진인 정대희 KDI 연구위원이 서술한 부분(4장)은 이미 KDI 현안분석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배포·보도됐음.

-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전 KDI 연구위원)은 '창업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성과평가와 개선방향: 정책금융을 중심으로'에서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정책금융지원 이력과 기업의 성과자료를 연계,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현황과 성과를 평가함.²⁾
 - 그 결과, 2009년 창업한 사업체에 대한 정책금융 신규지원 비율은 18.2%에 그쳐(1,751개 중 319개), 전체 중소기업 사업체 신규지원 비율 평균인 28.2%(57,378개 중 16,159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돼 기업연령별 정책금융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
 -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정책금융지원을 받은 창업기 사업체(업력 3년)가 지원받지 않은 유사 창업기 사업체에 비해 3년간 8%p 낮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낸 것임.
- 창업금융에서 일반적인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동일한 부작용이 발견됐으므로 당국은 정책금융지원이 창업기업의 성과를 오히려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함.
 - 정책분류체계에 있어 지원대상인 창업기업과 지원수단인 금융을 별도로 구분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하여 창업금융을 바르게 식별하고 관리해야 함.
 - 정책금융 배분 시 연령이 오래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여 재배분할 필요성이 높음. 특히 연령이 11세가 넘는 사업체의 26%(23,830개 중 6,192개)가 신규 정책금융 지원을 받고 있었던바 신속한 조정이 필요
 - 정책평가를 과학화·상시화하는 한편 정책대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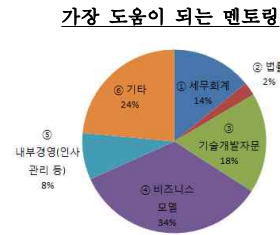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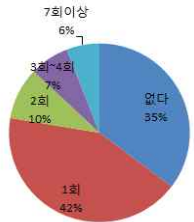
2) 본 연구는 2009년 광업과 제조업에 속한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에 신규 지원된 정책금융효과를 분석함. 보다 최신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가 필요할 경우 저자(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에게 문의

□ 구자현 KDI 연구위원은 '모험자본의 보육·육성의 역할과 과제'를 통해 모험자본의 공급뿐 아니라 보육·육성 기능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함으로써 모험자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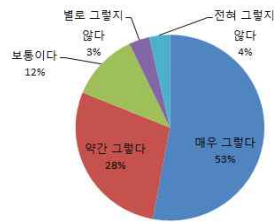
○ 정부가 운영하는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TIPS3)에 참여하는 기업 52개를 대상으로 TIPS 운영사가 제공하는 멘토링이 창업기업 성과4)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창업기업의 후속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운영사와 하루 평균 모바일 메신저 연락정도



운영사의 네트워크 연계 역할 적극성 정도



- 멘토링 만족도의 대응변수로 운영사와의 연락횟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멘토링이 창업기업의 후속투자 유치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3)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국내 유망 창업팀을 민간 주도로 선발하여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집중 육성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임.

- 가장 도움 되는 멘토링 분야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34%)이고, TIPS 참여기업의 과반 이상이 운영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으며(65%) 운영사의 네트워크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81%)

□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의 보육·육성 기능이 중요함을 시사. 정부가 모험자본을 공급할 때 모험자본의 멘토링 역할이 강화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함.

○ 비즈니스 모델 구축, 후속투자 유치 등 적극적인 멘토링 역할을 모험자본 공급 시 평가항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

○ 또한 성공한 창업가, 전문투자자 등 유의미한 창업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멘토링 역량을 강화해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남창우 KDI 연구위원은 '기업구조조정제도의 개선방향: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중심으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워크아웃제도와 법정관리제도의 기업정상화 성과를 비교분석하고 기업구조조정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

○ 지난 수년간 대기업을 위한 워크아웃제도가 법정관리제도에 비해 기업구조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특히, 2008년 이후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보다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에 부진했을 뿐 아니라 워크아웃 실패율(34.1%)이 외환위기 당시(19.3%)보다 높았음.

○ 특히 워크아웃을 실패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처음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보다 부실이 심화된 상태에서 법정관리를 시작함에 따라 자산축소 및 인력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진행함에도 경영개선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남.

○ 결국 워크아웃의 부진은 부실기업의 경영개선 지연으로 이어져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감독당국은 워크아웃제도를 규정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채권단과 채무자, 금융시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선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할 필요**

○ 법적 근거가 취약했던 '주채무계열제도'를 기촉법에 규정함으로써 채권단과 대기업집단이 자율적으로 채무개선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 하여 대기업집단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채권단이 선제적으로 대출관리를 하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출 시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수익성이 일정한 조건을 벗어나는 경우 자동적으로 대출상환기간이 단축되거나 이자비용이 상승하는 '조건부 대출약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 **기촉법의 강제적 구조조정 기능은 법정관리를 규정하는 통합도산법으로 통합하여 채권단 주도의 법정관리, 혹은 채권단 주도의 기업회생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통합된 법정관리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하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 주도의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이 높고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는 부실기업은 처음부터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를 진행하도록 개선

○ 채권단 주도의 기업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진행하도록 규정하여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의 신속성뿐 아니라 회생절차의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